

태안 피해 첫 보상금 지급... 전남 어민은 어떻게

삶의 터전 잃었는데 고작 200만원이라니...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해 타라 피해를 입은 전남 서해안의 무안·신안·영광 등 3개 지역이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현재까지 피해 양식 어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21일 영광군 연산면 두우리 창우마을회관에서 열린 '타라 피해 생계대책회의'에서 마을 주민 30명이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태안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1가구당 200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맞춰 전남도 피해 어민 1가구당 200만원 내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정부 지원금 300억원과 국민성금, 도 예비비 등을 포함해 총 558억원을 피해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전남도는 피해 어민들의 수가 태안 지역 보다 적은 점을 감안, 도 예비비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정부지원금 300억원만을 어민들에게 배분해 1가구당 긴급생계비를 평균 200만원선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긴급생계비는 단 한번 지원되며, 이후 보상은 보험사와 어민들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족히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 피해 어민들은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생계수단을 완전히 잃은 양식 어민들은 200만원 안팎의 돈으로 피해 보상금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200만원 밖에 안 되는 생계비도 절차가 까다로워 어민들에게 언제 주어질지 모른다. 생계지원 대상을 세 그룹으로 나누

피해 어민들 세금·융자금 이자 막기도 힘들어

보상 절차 까다롭고 기간 길어 생활 이중고

고,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생계비 지급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어민들은 200만원이 나오더라도 밀린 세금이나 융자금 이자 막기도 힘들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무안 등 타라 피해 지역 양식 어민들에 따르면 김 양식 어가들은 일반적으로 5천만원 안팎의 융자를 통해 양식을 한 뒤, 김 수확을 통해 이를 되갚고 있는 형편이어서 보상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어민들은 벌써 신화가 시작되는 3월을 걱정하고 있다. 생활비는 물론 목돈이 들어가는 자녀 학비 등을 털 길이 막막하기 때문

이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돼 선보상을 포함한 좀 더 완벽한 피해보상이 이뤄질지 학수고대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의 사례에서 보듯, 이번 타라 피해에 대한 보상도 최소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중적인 행정을 통해 설날 이전까지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크레인 선장 등 5명 업무상 과실 기소

檢, 태안 기름 유출 수사결과 발표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 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흥풍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측 모두에 무리한 항해와 충돌 위험 회피노력 결여 등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가해선박회사인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상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유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서산지청 대회의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장 조모(51)씨 등 구속 송치자 2명,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C(36)씨와

함해사, 또 다른 예인선장 김모(45)씨 등 중요 피의자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과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또 사고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적사인 흥풍의 '허베이 스피리트 선적 주식회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상크레인 선장 김씨는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하거나 닻을 내려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데도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유조선과 충돌, 사고 있던 원유 1만2천547kg를 바다로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다.

해상크레인 예인선(삼성T-5) 선장 조씨는 무리하게 예인 와이어를 작동, 끊어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항해일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하계 U대회 유치 지원 건의 박광태 시장

F1 대회 특별법 제정 촉구 박준영 지사

■ 정당선인- 시도지사 월 논의할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22일 회동하는 기회를 갖게 돼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자리는 제18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식 회의, 때문에 이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광역단체장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지방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도 공동 건의사항=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1천500억원)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광주시는 반도체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한국민주주의전담의 광주 유치 요청, 아시아문화전당 및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국유선양 및 국가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최소 7년 이상 장기간 개최되도록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지원 근거와 대회 개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의 조기 실현을 위해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 조기 제정,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의 조속한 실행 및 국고 지원, 서남권의 핵심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했다.

전남도는 이외에도 농어촌 교육개선 종합대책 마련, 농어촌 교육활성화 재원의 안정적 확보, 전남에 국립교육대학 설립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남도 '영산강 프로젝트' 뭍 담았나

전 구간 폭 60~70m 준설 옛 뱃길 복원

전남도가 21일 발표한 '영산강 프로젝트'는 새 정부의 호남운하 계획과 연계한 영산강 옛 뱃길 복원과 수질개선, 역사문화 관광기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그동안 추진해 오던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을 확대해 호남운하를 친환경적으로 개설해 이 일대를 역사·문화·관광·물류 거점으로 개발,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펼쳐나가자는 '영산강 프로젝트'를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안하ITP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영산강 하구둑~광주시 광산교 83.59km 영산강 전 구간을 폭 60~70m, 수심 6m 깊이로 준설해 뱃길을 복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산강 하구둑 배수갑문 및 통선문 확장 등 모두 35개 사업에 8조5천500억원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인수위가 호남운하 개설에 필요한 것으로 제시한 4조8천500억원

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이미 계획 중인 사업은 ▲영암·금호호 수로확장(2천640억원) ▲하도준설(하구둑~광산교 85km, 1천870억원) ▲수질개선(1천300억원) ▲강변도로 설치(2천60억원) ▲전반저류지 조성(1천830억원) ▲장성호 등 4대호 담수량 확대(1천480억원) 등 15건 3조5천910억원 규모다.

특히 1천730억원을 들여 기존 30m 8개로 돼 있는 배수갑문을 480m로 확장하고, 2천500급 컨테이너선이 드나들 수 있게 통선문도 60m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보성~임성간 철도노선 변경(17km, 4천억원) ▲영산강 하구둑 대체교량 건설(3km, 3천억원) ▲국제농수산물 물류기지 건설(8천억원) 등 20개 사업 4조9천640억원

도 추가반영돼야 할 과제로 제시돼 있다.

도는 특히 '영산강 프로젝트'에 1조6천억원을 들여 영산강 하구둑을 현재보다 상류 4km 지점까지 이설, 기존 하구둑 주변의 도시화에 대비 하도록 했다.

또 컨벤션타운·온하자료관, 실버타운 및 은퇴자 시티, 한옥형 전원마을 등 영산강 주의 문화 관광개발 14건(1조4천억원)에 대한 추진 계획도 세웠다.

박준영 지사는 "영산강 일대가 농지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구둑을 막는 바람에 주변에 남양과 하담 등 도시가 들어서 현재로서는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며 "현재 위치보다 4km정도 상류로 하구둑을 옮기는 것도 인수위에 건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실날 선물-안동 간고등어' (Real Gift - Andong Dried Herring) featuring a man in traditional Korean attire and various product images.